

광주·충남 3명 '가짜양성' 원인은?

“관리자 1명이 많은 검체 처리로 오염”

정은경 본부장 “검사 신뢰 문제 아냐...개선방안 만들겠다”

광주광역시와 충남 논산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최종 '음성' 결론이 나온 원인이 검체 오염으로 지목된데 이어 본질적인 이유는 검체 관리자의 업무부담이 커진데 따른 문제로 확인됐다.

15일 권계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이후 브리핑을 통해 “검토 결과 검체 취급과정 중 발생한 오류로 인해 위양성(가짜 양성)이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심환자의

객담(가래) 검체를 완충 용액에 섞은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검체가 오염됐다고 본 것이다.

권 이사장은 “검사가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남은 검체를 수거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재검한 결과, 객담검체는 음성, 완충용액을 섞은 검체에선 양성결과가 나와 검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이어 “3건의 사례 모두 상기도에서 음성, 하기도에서 양성”이 나와 신규 감염자들의 일반

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관, 같은 검사실에서 검사를 시행한 만큼 오염에 의한 위양성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검체 관리자의 업무부담으로 지목됐다.

권 이사장은 “현장점검 결과, 검사 관리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객담검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1명이 많은 수의 검체를 처리하면서 오염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계철 이사장은 “학회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번 주내로 검사전문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검체관리, 검사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오염 발생 등 위험이 있는 취약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도 “검사의 신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며 “위양성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중요 문제로 보고 있고, 앞으로 검사 양 보단 검사의 정확성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익실천협의회, 순천 모 아파트 주민대표 ‘고발’

“의혹 철저히 조사하길...위법 확인시 엄중 처벌해야”



최근 논란이 된 순천 조례동 H 아파트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아파트차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에 민원을 제기해 보상 차원에서 2억 1000만원을 받아 LED 직부등과 CCTV 등을 설치하면서 금액을 과다 책정,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김 모(58)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

지청에 고발장을 지난 14일 접수했다.

김 대표의 친인척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46) 전등회사 대리점 사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에 앞서 본지 등 일부 언론매체에서 김 대표가 2016년 당시 D 아파트 신축 반대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이후 본인이 위원장으로 역임하면서 친인척에게 공사를 맡기고, 과다견적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5월25일자 4면 순천 신축 아파트 주민피해 보상사업 과정 ‘뺨뺨기논란’ 기사 참조)

김화경 목사는 “김 모 대표는 순천 S모 교회의 집사인데도 정신 지체장애 1급 장애인에게 모욕적인 욕설 등 교회 내에서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으며, 본인은 한국 공

익실천협의회 대표 목사로 평소 장애인에 대한 인권신장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목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취합해서 분석한 결과 LED 조명등과 CCTV 설치 등을 하면서 피고발인 김 모 대표를 포함한 (당시)비대위 관계자 등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업무가 발생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김 목사는 “김 대표가 보상비 중 LED 부직등을 교체하면서 자신의 조카가 운영하는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익을 위해 김 대표 등의 범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신속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부채재본부 김승호 기자

짜증난다 인형으로 여친 때리고 주먹 휘두른 2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짜증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서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A씨(2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3시35분쯤 광주 서구 한 노상에 주차된 차에서 여자친구 B씨(21)의 얼굴을 차에 있던 인형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 대화를 하다 갑자기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마스크판매 가짜 인터넷쇼핑몰 운영 일당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국내 유명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모방해 피싱사이트를 제작한 후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존 유명 마스크 판매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그대로 모방해 피싱 사이트를 제작한 후 소비자 83명을 속여 43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A씨(26)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뚜렷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월 1일부터 5일까지 맘카페나 중고 판매 사이트 등에서 “지금 들어가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며 URL을 광고하고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사건을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왜 신천지 비난해” 선별진료소 구청 공무원 폭행

선별진료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40대 남성이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공무원행방배과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은평구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구청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서 A씨는 신천지 교인이었고 구청 직원들이 신천지를 비판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항의하다가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 설치 중 30대 남성 추락

15일 오전 10시56분께 울산 북구 효문동의 한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이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남성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울산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 해수욕장 앞 바다서 30대女 추정 변사체 발견

15일 제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53분쯤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이호조종면시험장 앞 5m 해상에 사람이 떠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회색 바지(돌핀팬츠)를 입고 있었으며 구명조끼는 입고 있지 않았다. 해경은 해당 여성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악성프로그램 판매 혐의 20대 ‘무죄’

온라인 게임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상대방보다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인 일명 ‘핵 프로그램’을 총 33차례에 걸쳐 189만5000원을 송금받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온라인 게임과 관

련해 가상화폐를 송금해주거나 문화상품권을 보내줬을 뿐 대가를 받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핵 프로그램을 구입한 B씨 등 3명이 A씨의 계좌로 구입대금을 송금한 사실 등을 보면 A씨가 핵 프

로그램을 판매한 것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핵 프로그램을 개발, 보관, 전송했다거나 A씨가 핵 프로그램을 재판매하기 위해 개발자나 상위 판매자로부터 핵 프로그램을 구매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봉우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